

원양어업의 경영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발전모델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이 상 고

(부경대학교)

A Study on the Structural Problems and Global Development Model and Policy of the Distant-water Fisheries, Korea

Sang-Go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May 18, 2006 / Accepted July 14, 2006)

Abstracts

With extension of national jurisdiction over coastal living resources, new dimensions and objectives should be add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istant-water fisheries concepts. For distant-water fishing nations, Korea, joint exploitation of these resources is today considered not only as a way of producing additional income opportunities, but first of all as at least a partial solution to neutralization of harvesting limitations imposed on them in traditionally exploited fishing grounds.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and reviews the various types of agreements currently in place and discusses the future of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astal States and fishing fleets from non-adjacent countries has been transformed since the 1980s. This was primarily a result of the declar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by many coastal states in the years leading up to the close of the negotiations of the UNCLOS in 1982. Significantly, by recognizing the right of coastal states to determine how their waters were to be exploited, UNCLOS provided a legal basis and economic motivation for the negotiation of access agreements between coastal states and distant-water fishing nations, Korea

There is a real danger that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could and do result in the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experienced in Korean coastal waters being transferred to third country water and consequently creating socio-economic problems for these third countries.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have the potential to be a force for good if they are well managed and if the principals that will be applied within Korean coastal waters, through the reform of the distant-water fisheries policy, are applied equally upon third country waters

Key words: *Distant-water fisheries, Fisheries agreement, EEZ, Negotiation of access agreement*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636, sglee@pknu.ac.kr

I. 서론

최근 수산물 수입 자유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침체로 인하여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으나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공해나 연안국의 경제수역에서 장기적인 투자전략보다는 단기 생산성을 우선시하고, 단순입어방식이나 공해자유 원칙에 기초한 결과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다른 1차 산업과 달리 국내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 해역의 자원을 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원양산업이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해외어장 축소와 해기사 수급난 등 우리를 둘러싼 원양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경쟁국들에 비해 우수한 산업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한 수요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990년 이후 지속되는 원양어업 생산규모 감소추세를 조속히 연착륙시켜 안정화된 생산규모 45~50만톤을 유지하면서 선진원양 기술과 시장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양산업의 주종산업인 원양산업으로 성장·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다가오는 해양산업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원양어업의 산업적 위상을 재평가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원양어업이 지니는 중요성을 직시하면서 건전한 원양어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원양어업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 그리고 경영악화의 내부요인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영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신해양질서에 부응하고, 새로운 국제통상기조에 적응하는 새로운 원양어업의 생존경영 전략을 구사하면서 세계

수산업을 리드하는 글로벌 원양어업 모델을 펼쳐나가야 한다.

세계 수산업은 이미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 EU 등 주요 원양어업국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바탕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도 전통적 식량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오대양을 누비는 원대한 바다경영을 통하여 다가오는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해양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양어업이 무엇보다도 첨단기술에 접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여 고급인력과 양질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현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원양어업이 우리나라 해양식량산업의 주력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동안 도전과 개혁의 정신으로 오대양을 누비며 겪은 산업경험을 토대로 생존경영 전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롭고 참신한 전략적 모델과 글로벌 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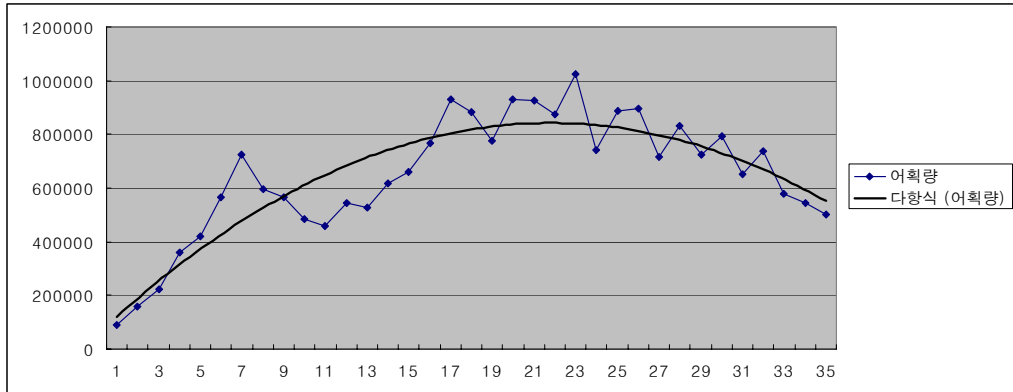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대한 국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원양어업이 지니는 성장의 한계와 경영구조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신해양질서에 부응한 전략적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글로벌 산업화 전략을 도출한다.

II. 원양어업의 경영구조적 문제점

1. 원양어업의 생산구조적 침체 상황

원양어업의 주요 경제변량의 장기 추세선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원양어업의 어획량의 감소 추세는 심각한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연안 및 공해상 어업자원의 감소나, 국제어업규제 강화, 연안국의 자원지대화 강화 등을 고려하면 원양어획량을 계속 감소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2년 100만톤의 원양어획량을 거양한 이후



주: 1) 종축은 어획량(단위: M/T). 횡축은 년도(1=1965년, 2=1967년,.....35=2004년)
 2) 다항식은 어획량에 대한 2차곡선의 오차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정된 추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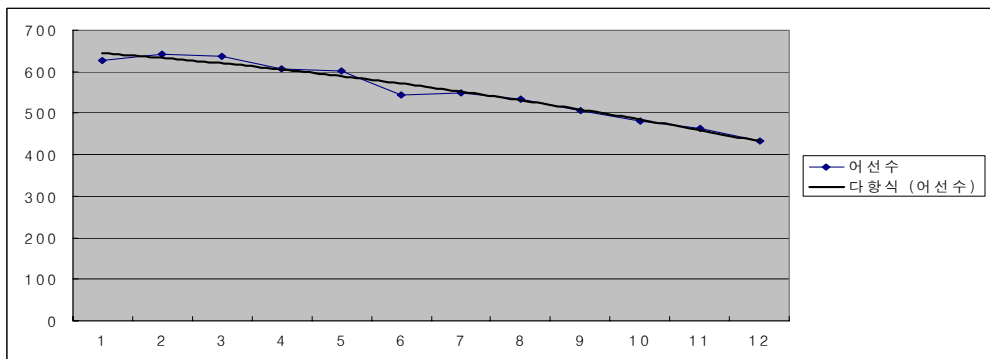
[그림 1] 원양어업 어획량과 추세선

지속적인 감소하여 최근 50만톤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감소 추세가 계속 진행될 조짐이라 2010년을 넘어서면 원양어획량 40만톤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조업경쟁국의 세력 확대와 자원상태의 불안정, 일부 어종의 고갈심화로 인한 국제적 자원보존 및 규제강화 등 어획량 감소 요인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어선 노후화, 고임금구조, 자원상태 불안 등으로 저생산성 비경제적 어로활동이 증가하고, 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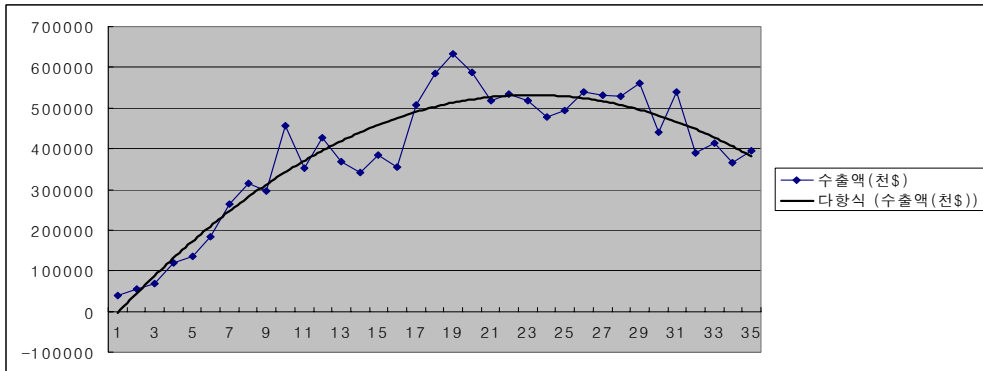
산성과 고임금구조에 따른 시장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영 불확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어기 단축 내지 출어 포기 등 어획 기회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

원양어업 어선척수는 장기적인 감소 추세로 1991년도 939척, 총톤수 421,384G/T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4년도 이미 433척, 총톤수 212,571G/T로 1991년 대비 약 45%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차후에도 그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



*주: 1) 종축은 어선수(단위: 척). 횡축은 년도(1=1993년, 2=1994년,.....12=2004년)
 2) 다항식은 어선수에 대한 2차곡선의 오차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정된 추세선

[그림 2] 원양어업 어선척수와 추세선



주: 1) 종축은 수출액(단위: 천\$), 횡축은 년도(1=1965년, 2=1967년,.....35=2004년)
 2) 다항식은 수출금액에 대한 2차곡선의 오차항이 최소화되도록 추정된 추세선

[그림 3] 원양어업 수출액과 추세선

라 오대양 원양어업의 기득권 내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적정척수 유지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의 경영전략적 구조개선과 산업지원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경제적 노후 어선의 신조대체와 경제성 있는 어로활동을 가능케 하는 어선개발과 경제체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선박조달 지원이 요구된다.

원양어업 수출액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로 1998년도 5억 6천만불인 원양어업 수출액이 정점을 지나 최근 점차 하락을 계속하여 2004년도에는 3억 9천만불에 불과하였다. 수입자유화의 다중적(수입증가, 가격하락, 관세인하 내지 철폐) 요인과 생산량의 감소, 비경제적 노후어선의 저생산성 및 저품질화 등으로 국제시장 수출경쟁력의 약화 및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원양어획물 수출국 시장의 여건 악화와 조업경쟁국의 공급위주 시장경쟁력 확대에 의한 수출시장의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5).

2. 민간주도적 성장의 한계

지난 195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되어 정책적 성장과 발전이라는 일면도 지니고 있으나 민간 주도적 경영

전략에 의해 오대양을 누비며 우리나라 식량공급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굳건히 해왔다. 그동안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세계 3위권 이내의 원양어업 생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양적 질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수산업을 주도하면서 국내 전체 어류 소비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간 4억달러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공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선진 원양국으로서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은 세계 10위권의 해양산업력의 발판이 되어왔으며, 특히 제3세계 국가의 외교적인 효과는 원양어업이 지니는 또 다른 산업적 역량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민간주도적 원양어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을 안고 있으며, 성장과 발전에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간위주의 단순한 입어, 어선노후화 등 고비용 구조, 시장자유화의 시장변화 적응력의 한계, 후발 원양국들의 세력 확대 전략, 연안국의 외국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강화로 해외어장은 날로 축소되고 있고, WTO/DDA와 FTA 등에 의한 수입 수산물 급증은 물론 조업경

비 상승으로 민간주도적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양어업의 민간주도적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어가에 반영되지 않는 어로경비의 상승문제이다. 원양어업 어로경비 상승은 대체로 원양어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일반적 요인으로는 어로자재 및 인건비를 포함한 투입요소의 가격상승이나 어로경비에 차지하는 유류비와 어구비의 높은 비중도 문제이다. 특히 유류비 상승의 경우 유류에 관련된 다양한 선상 어구대의 가격상승을 동시에 유발시키기 때문에 더 큰 어로경비 상승 요인이 된다.

그리고 어선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증가와 조업이동 경비의 증가, 어획물 저장 및 선도 유지의 비효율성에 따른 시장가치의 하락의 손실 증가는 결국 어로경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원양어업 경영이 지닌 높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높은 보험료율의 적용 또한 어로경비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로경비 상승 문제의 심각성은 원양어업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해되나 어로경비의 상승이 실제 어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양어업에서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원거리 문제, 시장의 수요패턴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어로자재 및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투입요소의 가격상승이 곧 바로 어획물의 시장가격 상승에 연계되지 않는다. 원양어업에 투입되는 원자재나 인건비는 타 물가 이상으로 상승하나 어획물의 시장가격은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참치어업에서도 어업에 투입되는 요소가격의 변화 추세는 후진국 유형의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어획물인 헛감용 참치의 일본시장 가격은 선진국 유형의 안정된 가격의 변화 추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참치어업의 어로경비 상승과 일본시장의 참치가격 사이에는 항상 심각한 괴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어로경비 상승이 시장가격에 흡수되지 못하는 비경제적 어업활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어로경비 상승이 바로 사장가격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어업의 경영수지 악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속적 어업기반을 위한 새로운 투자에 위험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3. 경영구조 실태 및 문제점

가. 어선노후화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초기단계부터 타인자본에 의존한 시설투자와 국내 조선기술이 미흡하여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중고선 도입 또는 용선형식으로 어선을 확보하였다. 또한 1970년대 수출증대와 어장확보를 위한 어선세력 확장을 서두른 결과 자기자본 부담과 과중한 시간이 걸리는 신조는 회피하고 모두 중고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오늘날 어선 노후화 문제를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양어선의 노후화 문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심각한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1976년도 원양어선 총보유척수 849척중에서 선령 11년 이상의 노

<표 1> 원양어선 노후화 심화의 진척 상황

구 분	1976	1980	2003	2004
총 원양척수(A)	849	750	464	433
선령 11년 이상(B)	395	414	459	427
노후화 비율(B/A)%	46.5	55.2	98.9	98.6

후선이 약 47%인 395척에 달하였다. 이후 노후선의 과다 보유는 장기적으로 원양어업을 위축시키는 근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왔으나 묘책은 없었다. 그래서 1980년에도 전체 원양어선 750척 중 선령 11년 이상의 노후선이 약 55%인 414척에 이르고,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어 2003년도에는 11년 이상의 어선이 전체 98.9%에 달하였고, 2004년도에도 433척의 원양어선 중 약 99%인 427척이 11년 이상의 노후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원양어선의 노후화는 어선 가동률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수리비 및 이동소요 비용의 원가상승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어획물의 선도유지에 필요한 적정어가 확보 문제 등 어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선 노후화 해결책으로 매년 재정지원을 통하여 신조를 추진하여 왔으나 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수지 악화와 용자조건이 불리하여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 담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어선의 노후화 문제해결이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일찍이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조대체 금리의 파격적인 인하와 같은 문제의 실효적 타개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변화나 뒷받침이 없었다. 그러나 원양어선의 노후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어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경쟁력 상실은 물론 생산기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나. 선원 수급

원양어업이 과중한 노동과 경영악화로 인하여 점차 채산성이 낮은 업종으로 전락하면서 어선원 희망자와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업종간 다소 차이는 있어도 원양어업 전반적으로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다. 그나마 있다 해도 대부분 생산성이 저조한 선원이며, 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고, 대체 가능한 외국선원의 승선도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선원 구인난은 결국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비과세 소득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하급 선원들의 소득세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선장이나 기관장 등 고급 간부선원들의 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나 일부 업종에서는 대만 등 조업경쟁국으로의 간부선원 이탈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다. 기존 어장 유지와 신어장 개발

원양어업의 진출 모델이 민간위주의 단순입어에만 의존해 온 결과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정책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어장의 안정적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안국의 정책이 합작사업 우선으로 전환되고, 대부분 선진 원양국의 협력투자 와 경제협력의 강화를 고려할 때 민간주도적인 원양모델에서 정부 정책적 원양모델이 요구된다.

특히 개별선사들의 민간위주의 절충을 통한 입어 형태는 자원이 풍부할 경우나 어업관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다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최근 연안국들의 불안정한 자원 및 관리상태를 고려할 때 다소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민간위주의 입어는 연안국들의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맞춤형 입어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업경쟁국과의 입어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조업경쟁국들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원양어업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협력중심의 입어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어장 개발에서도 정부나 업계의 지속적인 정책이나 전략이 미흡하고 자원평가나 시장성 평가를 통한 과학적 정보를 축적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어장개발과 어획물 시장과 연계된 전천후 어장개발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 넛트크래크(Nutcracker)에 직면

후발 원양국 대만, 중국의 저비용과 규모의 경제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압박하는 한편, 선진 원양국 일본의 기술적 우위와 해외시장 및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어장 및 시장경쟁력 확보에 경제적 네트워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5).

Ⅲ. 원양어업의 전략산업적 발전모델과 진출 유형

1. 원양어업의 전략적 발전모델

원양어업의 전략적 발전모델은 신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의 국제화된 일반적 운영방식에 기초하여 구성한다. 기본적으로 국제해양질서의 흐름에 적응하는 자원보유국과 원양국간의 자원개발 형태를 말한다. 원양어업 발달의 초기단계에서는 대체로 원양국의 어업기술이나 자본상태에 따라 원양어업 모델이 정해진다. 따라서 원양어업 모델은 원양국의 어업기술이나 자본, 해외협력의 정도, 그리고 연안국의 자국 자원개발과 경제진흥 정책 등 원양국과 연안국의 상호 호혜적 또는 일반적 지원 및 개발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최근 200해리 경제수역체제하에서는 원양어업 대상자원에 대한 연안국주의와 자원자국주의가 보편화되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의 대외 어업정책에 따라 원양어업의 모델 형태가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용만, 이상고, 2005).

원양어업 모델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해양질서의 흐름이나 국제통상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영전략과 정부정책의 의존도 함수로서 결정하였다.

가. 원양어업의 제1세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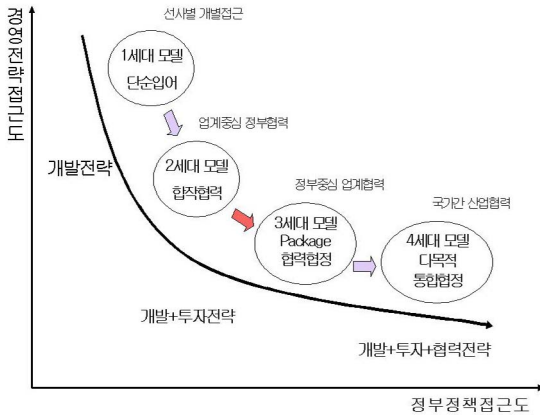
어업사적으로 원양에서의 어업활동은 어선, 어구 및 냉동기술의 발달로 확대되는 한편, 국제수

산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공해어장의 어족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연안 수산자원의 공급한계를 극복하거나, 수출산업의 육성차원에서 1950년대부터 원양어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풍부한 공해어업자원을 바탕으로 각국 원양어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양어업은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연안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로 공해어장이 대폭 축소되어, 세계 수산자원의 95%와 해양의 35%가 연안국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발효로 해양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국제적 제한이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역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자국의 잉여자원을 타국에 개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원양어업은 연안국의 공식적 입어허가를 통해 원양어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70년대 말을 거치면서 원양어업 모델 형태와 정책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때까지는 일반적으로 공해자유 원칙이 통용되거나 유엔해양법협약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주로 개별 선사에 의한 단순입어 형태로 북양이나 아프리카 수역에서 입어교섭이 이루어졌다. 원양어업 발전초기부터 입어제한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 시기를 통칭 원양어업의 제1세대 모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공식적 협정이전의 단순입어와 입어료 지불방식으로 대표된다.

나. 원양어업의 제2세대 모델

원양어업의 제1세대 모델의 입어료 지불방식은 금전적 보상이 국가재정에 큰 기여를 하는 일부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도서국들에게는 유용하나, 상대적으로 남미 일부 국가와 같이 재정수입보다는 자국수역의 자원개발과 어업발전을 보다 선호하는 국가들에게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



[그림 4] 원양어업 모델의 발전과 변화 추이

라 일부 원양어업은 이른바 제2세대 원양어업 모델로 알려진 미국이나 러시아 등 연안국과의 원양어업 분야의 합작투자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원양어업에 있어 기존의 선사별 개별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동체) 간 어업협력사업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양어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한 경우이다.

1980년대에 시행된 원양어업의 공동사업도 이 부류에 속하며, 대체로 합작기업과 합작투자사업이다. 이러한 제2세대 원양어업 모델로 전개된 것은 연안국들의 어업자원에 대한 자원지대의 창출 또는 증대의 요구와 어업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자국어업의 발전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 원양어업 제3세대 모델

원양어업 제3세대 모델은 현재 시행중인 여러 형태의 원양어업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의 제1세대, 제2세대 유형과 구분해 볼 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각종 수산관련 인프라 구축과 어업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어업관리 등 수산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는 일종의 협력 패키지(Package) 성격의 어업협정을 기반으로 한 원양어업의 형태

이다.

이는 원양어업 협정 상대국인 연안국의 어업자원 개발과 수산업 발전에 대한 요구가 날로 거세짐에 따라 기존 제1세대와 제2세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변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맺은 어업협정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국가간 쌍무어업협정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라. 제4세대 원양어업 모델

제4세대 원양어업 모델은 최근 국제적으로 신헤양질서의 흐름과 국제통상구조의 변화에 부응한 원양어업 모델로 국가간 협력기반에 기초한 협정형태로 지역 수산업에 투자를 허락받기 위한 협정서와 협정 상대국과의 보다 자유로운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하고 있는 유형이다. 그 특징은 어업협정을 포함하여 연안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개발투자자와 관련된 산업투자, 그리고 인력수급과 시장개발 등의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협정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어업분야에 한정된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이 전체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된 경우이며, 원양어업 진출을 위한 어업협정은 하나의 구성협정이 되는 셈이다. 특히 연안국과의 대외관계에 있어 기존의 단순협력을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려는 21세기형 원양어업 발전모델이다. 이에 따라 어업분야에 있어서도 쌍무어업협정 대상 연안국을 단순 교섭상대국에서 협력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을 원양어업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최근의 WTO/DDA 협상이나 세계정상회의(WSSD) 등에서 연안 개도국 지위에 대한 다각적인 국제적 지원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대부분의 선진 원양국들에 있어 원양어업 정책에 근간이 될 전망이다. 이 방식은 현재 EU, 일본 등 선진 원양국들이 추진중인 협정형태와 유사한 원양어업 모델이다.

		(경영여건: 재무, 국제경영, 시장개발 능력)		(대외경제협력 능력)
		내부 여건		정책 여건 → 강
-국제여건 -자원상태 -시장경쟁 -규제관리 -어업기술	약			
	↓ 외 부 여 건 ↓ 강	- 단순입어 진출방법	- 100% 직접투자 진출방법	- Package 지원 입어형
		- 입어료 지불 진출방법	- 단일 어장개발 진출방법	- 연안 수산개발 입어형
		- 공동사업 진출방법	- 기업이민 진출방법	- 경제협력유인형 입어형
		- 합작투자 진출방법	- Partnership 협력입어형	

[그림 5] 원양어업의 전략적 모델에 따른 해외진출의 유형

2. 원양어업의 전략적 모델에 따른 해외진출의 유형

원양어업은 연안국 인근 수역 내지는 공해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에는 단순히 연안국의 해역이나 공해에 출어하여 조업하는 단순입어 방식인 어장개발 진출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이 진전되고 원양어업국이 점차 늘어나 한 정된 어장에서의 조업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연안국의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공동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국민을 이민시켜 어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원양어업의 진출 내지 입어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부여건으로 국제질서의 변화, 시장상태, 연안국 자원상태, 국제 및 연안국의 규제관리 상태, 어업기술 등이 있으며, 내부 여건으로는 주로 경영여건으로 시장개발 능력이나 재무상태 및 국제경영전략 등과 대외경제협력 능력 등이 있다. 이러한 여건의 상호 결합에 의해 최적한 진출이나 입어 유형을 취하게 되나, 최근에는 주로 국가간 내지 개별선사의 대외경제협력의 정도에 의해서 유형이 좌우되고 있다.

최근 원양어업의 진출 내지 입어 유형에는 개

별선사의 경영여건과 정부의 정책적 협력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연안국과의 다각적인 협력 체제에 기반을 둔 입어유형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장확보 전략 및 정책의 주안점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체 내부여건과 국가의 대외정책 여건에 따른 선택, 그리고 국가간 협력과 연안국의 지위를 보장하는 경제협력의 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입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IV.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산업화 전략

1. 원양어업의 유형별 경쟁력 강화정책

가. 제1세대, 제2세대 모델의 시장경쟁적 기반 정책

제1, 2세대 원양모델의 주요 정책은 생산기반과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어업의 주요 생산요소인 어선, 선원, 어장에 관련된 정책들이다. 원양어업이 어로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1차 채취산업이므로 시장경쟁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장경쟁력은 주로 생산성의 우위를 통한 저가 또는 양질의 어획물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제

1, 2세대 원양모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은 원양어업의 생산위주 경영전략과 생산기반 강화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 침체현상을 극복하고 안정적 정착육으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선원, 어선, 어장의 생산기반의 강화정책이 중요하다.

나. 제3세대, 제4세대 모델의 국가 전략적 산업정책

제3, 4세대 원양어업 모델의 주요 정책은 제1, 2세대 원양어업 모델의 생산기반 강화 정책과는 달리 주로 원양어업의 주요 경쟁업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으로 구성된다. 원양어업을 단순 어로어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산업의 관점에서 정책 접근을 한다. 그래서 생산위주의 시장경쟁력 정책보다 산업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정책으로, 그리고 원양어업의 전략적 산업의 관점에서 정부관리와 시장개척에 정책의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정책에는 주로 원양어업의 선택적 핵심 업종의 육성 및 제도적 관리, 글로벌 경영체의 구성과 시장전략의 다변화 등으로 주요 정책을 구성한다.

2.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구성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이나 국가정책은 우선 개별선사들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맞춘 시장경쟁력 확보 정책과 정부의 전략적 산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정책이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별선사의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중요시 되는 정부의 보완적 지원정책은 주로 생산기반에 기초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부 관리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개별선사들의 경영활동을 통제, 관리 내지 생산수단의 규제,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 발전의 틀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책은 크게 시장경제적 지원정책과 국가 전략적 관리정책으로 2분화하여 구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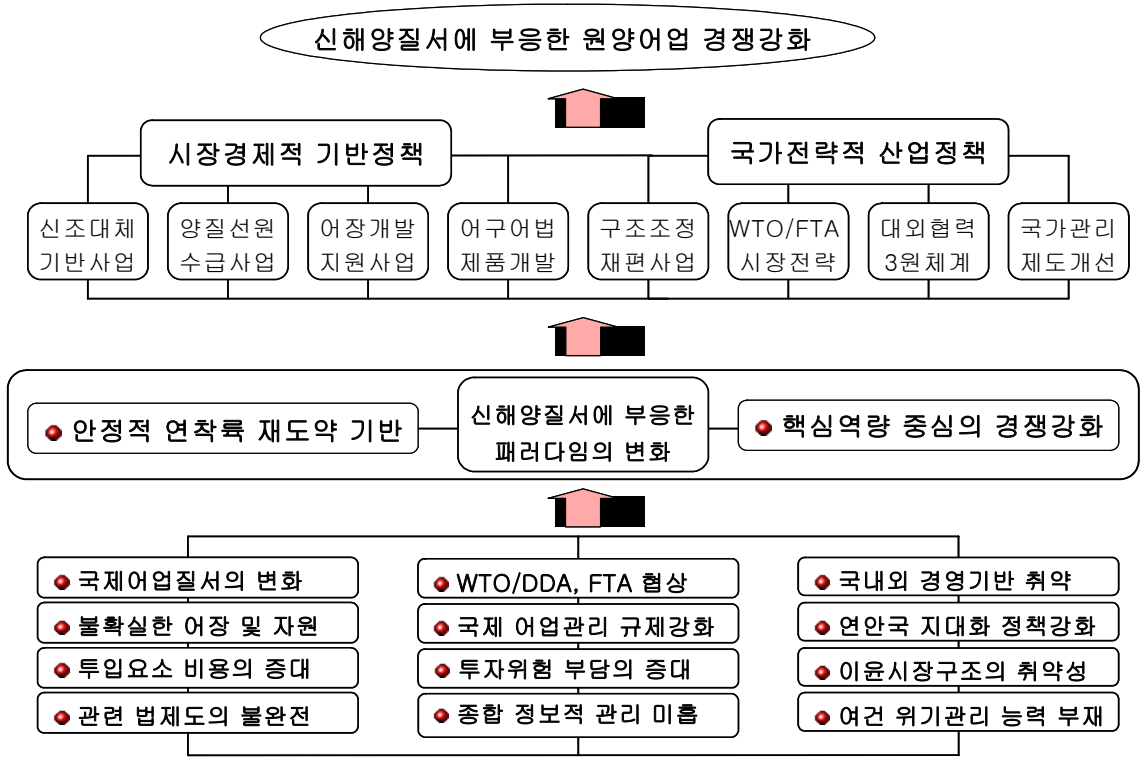
이같이 원양어업의 정책추진 사업을 2분화로 분류한 것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원양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서 산업기반의 안정화에도달하려는 시장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성장, 발전의 원동력을 지니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핵심 업종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국가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3. 21세기 글로벌 신성장 해양 핵심 산업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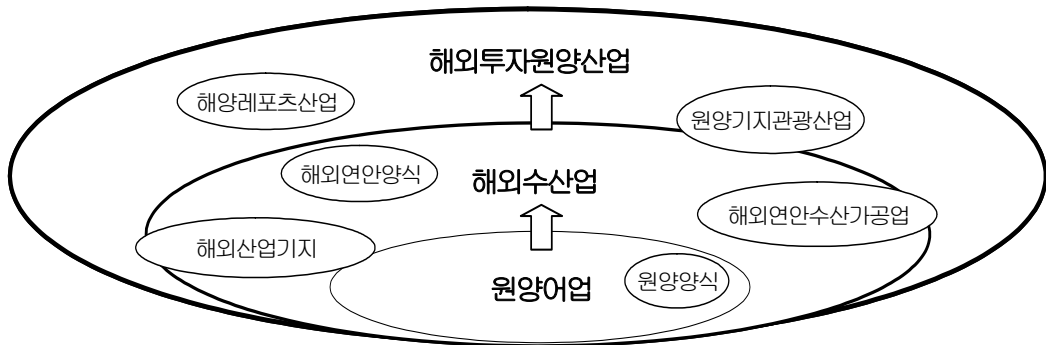
원양어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닌 글로벌 원양산업으로 발전하여 21세기 해양산업의 주된 핵심 산업으로의 발전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해외어업은 물론 다양한 기술협력사업에 병행한 원양양식 및 연안가공업에 대한 현지 투자 등 원양어업에 관련 전방위 협력개발과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원양어업에서 해외수산업으로, 다시 해외투자 원양산업으로 성장·발전하여 <그림 7>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글로벌 해양산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신성장 고부가가치 해양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해양의 청색산업으로 발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전략적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원양산업을 육성하여 원대한 해양경영의 세계 일류 해양산업 잠재력을 구현하고, 원양어업이 풍부한 생물자원과 건강한 해양생태 환경속에 지속적인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고, 해양 Bio 및 식품생명과학의 고부가가치 원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및 정보기반을 구축한다.

해양식량산업인 원양어업의 전략적 원양산업으로의 발전을 통한 풍요로운 자원 웰빙을 추구하는 해양공동체를 실현하고, 선진원양어업국의 기득권을 심분 활용하여 국제해양사회를 선도하는



[그림 6]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2분화 정책의 구성체계



[그림 7] 원양어업의 신성장 해양 핵심 산업화의 발전체계

해양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해양주권과 드넓은 대양에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울지를 펼친다. 전세계(특히 제3세계)로 뻗어나가 있는 원양기지들은 그 존재만으로 훌륭한 세계화의 가치가 있으며 문화적 교류를 더하여 우리나라 세계

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으며, 원양어업의 정보화 산업의 차원에서 블루오션 전략(차별화 저비용을 통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경영전략)으로 접근하여, 국가전략적 정보산업으로 육성한다.

V. 결론: 정책적 함의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침체 속에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해양질서와 함께 거세게 밀려오는 자유화의 물결속에 원양어업의 발전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해상 어업관리의 강화, 연안국의 자원감소 내지 자국화 그리고 수입자유화에 연유한 “어획물 반입”이란 경제적 동기의 소멸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더욱이 시장개방화와 신해양질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발전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업계와 정부의 공조적 발전전략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공해나 연안국의 경제수역에서 장기적인 투자전략보다는 생산성 높은 어장을 찾아 조업하는 전통 어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입어방식이나 공해자유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공해어업 규제 강화와 연안국 어업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대외 의존적 생산구조이다. 여기에 어획물 반입이란 시장보호적 특혜 속에 기반이 취약한 1-2척의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경쟁 및 자본구조상 더 이상 지속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21세기 신해양시대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어업환경의 현실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산업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3장에서 구축된 원양어업의 세대간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제1세대에서 제4세대의 변화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순 입어가 아닌 양식가공 등 수산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더 나아가 어업관리와 유통 및 시장을 통한 다양한 투자를 바탕으로 연안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적 진출을 모색하고, 영세성과 어선 노후화, 미숙련 해외선

원의 대거 고용 등과 같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경영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시장과 자본기술을 이용하고 부가가치화, 경영의 다각화와 글로벌 정보관리에 부합되는 원양어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그림 7>의 원양어업의 신성장 해양 핵심 산업화의 발전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적응력 높은 다양한 원양산업구조로서의 지속 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신해양시대 원양어업의 글로벌화 전략에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산업의 경영전략과 마찬가지로 연안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어업자원을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원양어업의 단순한 어업생산 및 관리에서 연안국의 수요자 중심이나 해역별,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원양어업 관리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신용민·이상고, “EU의 원양어업정책 연구”, 『국제지역연구』 Vol.9 No.3, 2005, pp. 786~806
- 최종화, “해양법의 발전과 공해조업권의 변질”, 『해사법연구』 10(1), 1998.
- 최종화·김영규,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자원 보존관리협약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16(1), 2004.
-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원양어업협회 30년사, 1990.
- 한국원양어업협회, 「1995년도 주요어업무보고서」, 1995.
-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 772-791호, 1996. 1.~10.
-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통계연보』, 각년도.
- 한국원양어업협회, 내부자료, 2004-2005.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구조조정 방안』, 2000.
- 해양수산부.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2002.
-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새로운 어업협력시스템 구축방안, 2004.3.
- 해양수산부, 해외어장 진출가이드, 2002.8.
- 해양수산부.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원양어업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 해양수산부. 『해외어장개발 장기정책방향 연구』, 2003.
- 해양수산부, 부경대학교, 심포지움 Proceedings 『원양어업 생존경영전략과 정책방향』, 2005.8.
- 해양수산부,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응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05.
- 古谷 清, 新時代に生き抜く日本の遠洋 マグロ漁業 「水産世界」No. 43-9 1994.9.
- 佐竹 五六, 日本をめぐる海外漁業の動向と財團の役割一併せて途上國に對する技術移轉をいかに考えるかー (その1, その2), 海外漁業協力 47号, 48号, 93年 4月, 及び 93年 12月, pp.1~43, pp.1~37
- Pintassilgo. P. and C. Duarte. "The New-Member Problem in the Cooperative Management of High Seas Fisheries." Marine Resource Economics. Vol.15. pp. 361~378, 2001.